

개헌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 시기·방법은 제각각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

인적 청산·제도 혁신 병행
대선 이후 곧바로 개헌해야
독일식 정당명부제 바람직

1 사회경제적 양극화, 민생경제 파탄, 정쟁에만 몰두하는 무능한 정치권, 반칙을 일삼는 특권층 회로 등에 대한 분노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인적 청산과 제도 혁신을 함께 추진해 새로운 사회체제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

2 이제 정치권은 제도적 청산과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정운영시스템 붕괴, 결체 없는 절대권력 문제, 민심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합리적 토론과 타협을 터부시하는 진영논리와 이에 기생하는 정당제도 등을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제제를 만든 헌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가능한 한 빨리 개헌논의를 시작하되 대선을 먼저 할 수밖에 없다면 공약 후 집권하자마자 개헌을 해야 한다.

3 호남 소외는 정치·경제·사회적 권력이 편재돼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의에 기반한 선거제도, 지역균형 발전을 방해하는 각종 제도, 편견을 재생산하는 문화 등 적폐를 척결해야 한다. 지지율과 국회 의석수 비례해 민심이 제대로 대표되고, 차이를 인정해 서로 토론하고 타협을 존중하는 정치제도가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

4 개헌과 선거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타협하는 통합의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합의제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유승민 의원

국민은 공정한 사회 원해
열린 지역주의 실현 중요
4년 중임 대통령제 필요

1 촛불 정국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민주주의 질타 훼손과 공적 체계의 붕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자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누적돼온 정치적 패권주의, 경제적 양극화, 사회 분열의 응축이라고 할 수 있다. 촛불정국 속에서 우리는 이런 국민의 분노·아픔과 함께 국민의 요구도 읽어내야 한다. 그것은 '따뜻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정신이다.

2 국민의 기대는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대우가 보장되고 서로 포용하는 공동체가 뒷받침하는 사회다. 이런 가치와 이를 담아낼 정치적·사회적 제도를 갖추지 못한 사회는 아무리 화려한 로드맵을 제시한다고 해도 국민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없고 새로운 대한민국은 요원한 꿈일 수밖에 없다. 보수개혁 나아가 정치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3 지역패권주의는 호남과 영남, 어느 지역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 채 두 지역을 정치적 이념의 희생양으로 전락시켰다. 호남을 비롯한 지역의 엄청난 잠재력과 자원들을 대한민국 발전과 선순환 관계, 더 나아가 국민대통합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공생의 열린 지역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이번 보수개혁 역시 열린 지역주의를 실현하고 가치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4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개헌을 추진한다면 권력구조뿐 아니라 국민기본권과 선거제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조항도 같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부겸 의원

사회 양극화 해소 시급
친일세력 70년 적폐 청산
지방분권강화로 격차 줄여야

1 촛불 민심이 폭발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더욱 심화한 경제적 불평등,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안보 무능과 국민 안전에 대한 누적된 불만 때문이다. 저성장 국면 장기화에도 재벌 위주 경제정책이 지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양극화 해소와 공존의 한반도,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2 촛불 민심을 완성하는 것은 친일 세력에 의해 잘 못 끼워진 정부수립 이후, 70년간의 적폐를 해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다. 개헌을 통해 대결정치를 공존정치로 바꾸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서민·중산층 삶을 약탈하는 경제를 공존·포용 경제로 바꾸고 국민기본권 강화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통해 국민통합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3 호남이 소외받는 것은 중앙집권적 정치구조 때문이다. 지방분권을 강화해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지방정부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개헌으로 재정과 사법권, 인사권 독립을 이뤄야 한다. 호남은 항상 정의·민주주의 등 대의를 위해 희생을 강요당해왔다. 이제는 호남도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 대등한 대접을 받도록 해야 한다.

4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병폐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이 필요하다. 중앙권력을 분산시키고, 지방정부에 대폭적인 권한이양을 해야 한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도 고쳐야 한다. 한 정당이 특정지역을 독식하는 선거제도도 정치를 후퇴시킨다. 중대선거구제도의 개편을 통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야 한다.



남경필 경가지사

정치·경제분야 리빌딩해야
수도권 기득권 깨면 균형발전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절실

1 첫 번째는 분노를 통한 과거체제의 청산이다. 이 부분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고 새누리당이 분당하면서 어느 정도 충족돼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미래비전을 담고 있다. 촛불집회의 함의는 국민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투영하려 하는 것이다.

2 대한민국을 리빌딩해야 한다. 과거 반성을 시작으로 새로운 정치·경제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분야 리빌딩은 연정이다.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 다수와 공유하면 상상·화합의 정치가 가능하다. 경제분야 리빌딩은 공유적 시장경제다. 중소기업에게 유통·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물류센터나 매장 같은 공유플랫폼 인프라는 정부가 설치하되 운영은 민간전문가에 위임하면 된다.

3 이념을 뛰어넘는 제4의 길을 제안한다. 보수·진보의 이분법적 접근을 하기보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실시 중인 민생연정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가능하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성립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필요하고 수도 이전과 같이 수도권의 기득권을 깨고 정경유착을 중단시키면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4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대선 전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선 과정에서 공약하고 임기 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력구조는 경기도 연정처럼 대통령이 직접 뽑히도록 내각제 요소를 가미해 장관을 의석수대로 배분하면 된다. 국회의원 선출은 지역주의와 승자독식이라는 폐단을 소선거구제를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 절실하다.



정운찬 전 총리

촛불은 불의 타파 시민혁명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조
개헌 골든타임 ... 다당제 필요

1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담으로 산업화·민주화에 성공했으나 제도의 민주적 운영에는 실패했다. '촛불'은 국민과 헌법을 우뚝한 대통령은 물론, 사회적 불평등을 외면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임이다. 나아가 '박정희식' 불균형성장이 초래한 양극화와 빈곤 세습, 소통 부재, 정경유착을 불사르는 시민혁명이자, 이제 더불어 잘사는 나라, 국격에 걸맞는 리더십, 공정한 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정신에 부응해야 한다.

2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중대한 전환점에 서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대한 시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 차분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때다.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권적 정치문화, 재벌의 독점적 시장 지배 구조를 일소하는 국가 대개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승자 독식(獨食)의 경쟁체제를 상생과 공유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정치·경제·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증진해야 한다.

3 국무총리와 동반성장위원장으로 일하며 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심초사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념·계층·지역적으로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는 것은 통일보다 앞서야 할 당면과제다. 대·중소기업 간의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 지역·계층·노사·남북 간에도 동반성장을 이룩해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4 대통령제 도입 이래 모든 대통령이 실패로 끝났다면 이것은 사람의 문제 이전에 제도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대통령 권한이 정치되고 월등한 대선후보가 없는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개헌을 통해 국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다당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천정배 전 대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
정치·경제 등 혁명적 변화
호남주도 정권교체 이뤄야

1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을 끌어 내리는 것을 넘어 낡고 부패한 기득권 체제를 해체하라는 거대한 분노이자 저항이다. 박정희에서 시작, 전두환을 거쳐, 박근혜까지 이어진 낡고 불공정한 기득권 체제의 청산으로 집약된다. 인간의 존엄을 되찾고,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요구다.

2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처벌을 계기로 구제제를 청산해야 한다. 이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혁명적 변화를 이뤄야 한다. 권력기관과 독점재벌에 대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실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3 호남은 항상 불의에 맞서 싸워왔지만 늘 차별받고 소외됐었다. 호남의 정당한 몫을 찾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말하는 정의와 평등, 국가균형발전의 요체다. 호남주도의 정권교체를 통해 호남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나아가 국민대통합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4 개헌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서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와 지지율만큼 정당 의석수가 배분되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독일식선거제)를 실현시켜야 한다.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바꿔 합의와 상생의 정치를 정착시켜야 한다.

태영21 병원 개원 5주년

박문경 초청음악회
| 전, 광주시향 첼로수석 |

바히르 챔버 오케스트라 협연

2017년 1월 19일(목) 7:00(PM)
태영21병원 세미나실

태영21 병원

- ▶ 인공신장실(야간투석)
- ▶ 종합검진센터(전신 MDCT 보유)
- ▶ 당뇨병·갑상선 연구소(국가공인)
- ▶ 유방클리닉(외과 전문의)
-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 입원실(46 bed)
- ▶ 아침 7:30분 부터 검진시작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신세계 백화점

유스퀘어 터미널

운암동

광주천변로

광천사거리

태영21병원

백운동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백화점
나루터
500m
대산프리모가발